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2021지역언론 톺아보기\_1월4주>

**‘진보 성추행’이 아니라 ‘김종철 전 정의당대표 성추행’입니다.  
부산일보의 제목은 이번에도 틀렸다.**

지난해 4월 23일, 부산일보는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소식을 전하면서 온라인 기사 제목을 <[속보] 오거돈 사퇴는 여자 문제 때문>이라고 달았습니다. 사퇴의 원인인 ‘성추행’을 ‘여자문제’로 둔갑 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렸을 뿐 아니라, 성범죄의 원인을 ‘여성’에게서 찾는 구태를 답습한 틀린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 #실시간핫뉴스

> [속보]오거돈 사퇴는 여자 문제 때문

▲ 2020년 4월 23일, 부산일보 온라인 기사

사건의 본질과 벗어난 제목 달기. 같은 문제가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사건 보도에서도 반복됐습니다.

1월 26일 자 부산일보는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을 1면 머리기사, 정치면(4면) 머리기사로 올렸고 사설에서도 언급해, 이날의 가장 주요한 이슈로 다뤘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이번엔 정의당…‘진보 성추행’ 보선 판도 흔들나>(1면)와 <‘진보 성추행’에…목청 키우는 ‘국힘’ 자세 낮추는 ‘민주’>(4면)로, ‘진보 성추행’이라는 표현이 공통으로 등장했습니다.

부산일보는 이번 사건을 ‘김종철 전 정의당대표 성추행’이 아니라 ‘진보 성추행’이라 명명함으로써 진보진영의 문제로 틀 짓고 있는데요.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원인을 ‘여성’에게서 찾는 우를 범했듯,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은 ‘진보 성추행’이라 틀 지음으로써, 보수-진보로 이분화되어 있는 정치권의 유불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부산일보는 성범죄 사건의 본질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주변 효과, 그중에서도 4·7보궐선거에 미칠 영향만을 전했습니다.



▲ 부산일보, 1/26, 1면

‘4·7 보궐선거’와 ‘진보 성추행’ 프레임의 만남. 1면 머리기사의 제목은 <이번엔 정의당... ‘진보 성추행’ 보선 판도 흔들나>(1/26)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정치권은 당혹감 속에 김 대표 사건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 ‘진보 진영 전체가 도덕성에 큰 타격’, ‘선거 구도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라는 서술을 통해 이번 사건이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습니다.

기사는 정의당 입장과 김종철 전 대표의 입장문을 인용했고 이어서 ‘충격’, ‘당혹’으로 점철된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과 국민의힘당 배준영 대변인의 논평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한 장혜영 의원의 “피해자임을 밝힌다”는 내용의 입장문은 기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의당 당대표가 소속 국회의원에 가한 성추행으로, 이후 처리와 대응도 당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채 거대 양당의 목소리를 주요하게 부각했습니다.

## ‘진보 성추행’에… 목청 키우는 ‘국힘’ 자세 낮추는 ‘민주’

진보진영 보선 후폭풍 초긴장  
민주, 충격 속 입장 표명 자제

“안희정·박원순·오거돈·김종철  
꼬리 무는 죄과 민낯 심판해야”  
국민의힘, 수위 조절하며 공세

25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보진영은 큰 충격에 빠졌다. 당대표가 소속 국회의원을 추행하는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정의당은 창당 1년 만에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 동시에 성추행 의혹으로 4월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상당한 약재를 만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은 보선 예비후보들을 중심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성 비위 문제를 집중 재검토하며 공세를 냈다.

부산시장에 나선 국민의힘 이진복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김종철 등으로 이어지는 죄파 권력자들의 성범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가짜 인권주의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연주 예비후보 역시 “들만 나면 인권 부르짖던 운동권은 민낯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며 “이번 보선은 서울·부산 모두 성추행으로 이어났고, 이번 선거는 성추행 심판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전 의원은 “인권과 진보를 외쳐



정의당 원내연설부장인 배백주 부대표(왼쪽)와 정호진 대변인이 25일 오전 국회 소회의실에서 김종철 당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대표단 회의 결정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김종철 기자 kimjh@

온 이들의 이중성과 민낯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번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일관되고 엄중할 무관용 원칙 적용에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사건으로 중도층 표심이 진보 진영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다만 성 비위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자칫 2차 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에서 당 차원에서는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경우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의 사법노선 이외에 의원들은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번 성추행 사건이

정의당에서 발생했지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등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충격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또 다시 민주화·진보 진영 대표급 인사 성추행 사건이 나오면서 파장을 가능할 수 없다는 곤혹스러운 기류가 읽힌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진보 진영에서는 초대형 성 비위 사건이 이어졌다. 2018년 비리의 성폭행 폭로로 자리에서 물러난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오 전 부산시장도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

한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안 전 지사와 박 전 시장의 경우 범여권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라는 점에서 충격이 더욱 컸다.

한편 이날 성추행 가해자로 추락한 김 대표도 진보 정치의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혔다. ‘노회찬-심상정’ 뒤를 이어갈 차기주자로 평가됐다. 1970년생인 김 전 대표는 1990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을 지냈다. 민주연합(PD) 계열로 분류된다. 고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 선인대변인 등 주요 중앙당직을 역임했다. 서울 용산구청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총선 등에도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민지형 기자 ossi@busan.com

▲ 부산일보, 1/26, 4면

부산일보 4면 <‘진보 성추행’에…목청 키우는 ‘국힘’ 자세 낮추는 ‘민주’>은 4·7 부산·서울 보궐선거 국민의힘당 예비후보들의 입장을 주요하게 전달하며 시작하는데요. 이어 기사는 “국민의힘에선 이번 사건으로 중도층 표심이 진보 진영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진보 진영에서 성 비위 사건이 이어진 탓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라 서술했는데요. “파장을 가능할 수 없다는 곤혹스러운 기류가 읽힌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기사 역시 국민의힘당에겐 유리한 형국을,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불리한 형국이 조성되었다며 선거 유불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